

북한 전통문화의 문화유산화 과정과 주민 일상의 변화*

비물질문화유산 지정과 주민 생활문화의 변화를 중심으로

권혁희**

최근 북한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정책 중 가장 활발한 분야로 비물질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의 지정과 진흥정책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은 1980년대 후반 이래 지속되어 2000년대 정착되어 간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김정은 정권 이후 내부적 문화정치에서 글로벌한 수준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중 전통명절, 조선옷, 민족음식 분야는 비물질문화유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주민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수행하는 인민의 실천은 정치적 의무감에 따른 수동적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고 있다. 특히 전통명절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부합되지 않는 기존의 문화적 관성과 고난의 행군 이후 가속화된 시장화의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 인민들은 조선민족제일주의나 비물질문화유산과 같은 권위적 담론을 휴일과 여가와 음식과 옷의 소비, 조상의례의 실천을 통해 그들 나름의 삶의 방식으로 수용하거나 조정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무형문화유산, 문화유산 정책, 전통명절, 조선옷, 민족음식, 생활문화

* 이 논문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과제번호: 0448A-20210009)와 아태무형유산센터(과제번호: 0448A-2021001)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조교수.

1. 서론

2010년 이후 북한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정책 중 가장 활발한 분야로 비물질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의 지정과 진흥정책을 들 수 있다. 신문, 잡지를 비롯해 방송,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민족 고유문화를 소개하는 코너가 많아졌으며, 비물질문화유산 지정 뉴스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부터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지정이라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제도의 변화와 정책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실시한 남한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12년 비물질문화유산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래 현재 120여 건 이상을 지정한 것으로 추정된다.¹⁾ 북한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 한정되어 정확한 지정목록과 사유, 정책의 세부사항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비물질문화유산이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함께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임은 분명하다. 물론, 전통문화 진흥정책은 1980년대 후반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시작으로 김정일 정권 시기에 안착된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의 중심은 사적과 건축물, 각종 유물과 같은 유형문화유산이었던 반면 김정은 정권 시기에 이르러 무형문화유산 분야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문화유산이 그 자체의 본질적 특성이 존재하기보다는 해당 사회가 어떻게 사용하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생각하

1) “비물질문화유산의 보호 및 계승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 조선중앙통신, 2021년 11월 5일.

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 역시 민족주의를 자양분으로 하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구성된 담론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진흥정책도 민족문화의 보존과 전승이 어떻게 정치적 정당성으로 그리고 인민들이 수행해야 할 일상적 실천으로 확산되었는지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글로벌화되는 유엔 중심의 문화유산 담론의 구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논의 또한 이와 같은 문화유산의 정치성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

특히, 북한에서 비물질문화유산 제도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에 의해 착수된 전통문화 진흥 정책은 물론, 그 이전부터 형성된 사회주의에서의 민족문화 계승의 프로젝트와도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이미 김일성은 해방 직후와 6.25 전쟁을 통해 일제와 미제의 민족문화 유산 파괴를 대신해 문화유산을 보호, 관리하는 정책을 펴온 바 있다. 박물관 건립은 물론, 유적과 고건축 등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를 만들었다. 물론 지배체제를 공고하기 위해 항일혁명역사까지 문화유산화시키는 북한적 변형이 이루어졌지만 민족의 역사성을 보증하는 전통적 문화유산은 사회주의 건설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일부로 이어져 오게 된다.³⁾ 문제는 유형문화유산이 아니라 과거 전통문화인 무형문화유산 분야는 봉건주의의 잔재로 억압 받거나 정책의 관심대상에서 주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소위 무형문화유산인 과거로부터의 전승문화를 정책화하는 시점은 김정일에 의해

2) Regina F. Bendix, "Aditya Eggert and Arnika Peselmann," *Heritage Regimes and the State*(Göttingen: Göttingen University press, 2013), p.13.

3) 권혁희, "북한의 문화유산 담론의 창출과 변화," 『북한학연구』, 제17권 1호(2021), 406쪽.

촉발된 조선민족제일주의가 표면화되는 1986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음력설과 추석, 단오, 한식과 같은 명절이 이 시기 부활되었으며, 명절에 입는 옷과 먹는 음식, 민속놀이가 사회 각 부분에서 장려되기 시작했다. 또한, 명절의 복원과 함께 기존의 유형문화유산의 진흥도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평양의 고대 왕릉을 복원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양중심역사관을 강화시키고, 단일민족의 역사적 서사를 실증해 주는 유적과 유물은 더욱더 부각되었다. 동시에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문화로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의 퍼즐을 완성시킴으로써 전통의 부활은 전면화된다. 물론 무형문화유산의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북한의 체제불안과 세습구도의 정착과정에서 변동성이 컸던 시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의미와 해석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인민의 관점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와 비물질문화유산의 진흥은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놀고 쉬는 사람들의 일상문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30년이라는 한 세대의 시간 속에서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⁴⁾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제도의 창출을 이해하기 위해 제도의 실천 과정에서 주민들의 일상과 어떠한 관계를 구성해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무형문화유산은 해당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의미가 재생산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부여되기도 한다. 이는 과거 문화가 탈맥락화되는 현상으로서 현실의 일상생활로부터 유리되는 사례들 역시 다수 나타나게 된다. 북한 역시 그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정책은 현실 생활문화에서 전통이 전승되

4) 권혁희,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의 변화와 특성,”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08), 224쪽.

는 환경을 조성하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가장 쉬운 예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통적 옷을 입고 결혼식을 하거나 전통명절에 무슨 놀이와 먹거리가 있는지에 대해 선전과 홍보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일부는 일상에 적용할 것으로 요구받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일상적 실천이 당국의 일방적 강요와 의무감에 의해 실천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일부는 인민의 삶과 유리되어 미디어 속에서만 재현되거나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비물질문화유산 담론의 형성과 실천을 이해하기 위해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책 이래 시행된 명절과 의복, 음식문화를 중심으로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3가지는 북한 당국에 의해 선택된 민족문화 진흥에 있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인민의 일상에 직접 적용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명절의 경우 기존 사회주의 기념일과 비교하여 어떠한 일상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실제 생활문화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비교할 것이다. 또한 조선옷과 음식 등은 각 기관과 학교를 비롯해 공장과 농장단위의 집단을 통해서 보급되거나 인민들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⁵⁾

5) 본 논문의 작성을 위해서 북한에서 발행된 단행본, 신문과 잡지 등의 문헌자료 외에 탈북민들의 구술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술자료는 필자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한국연구재단의 “통일한국 토대 구축을 위한 북한 생활문화·역사 DB 구축”사업단의 인터뷰 자료를 참고하였다. 인터뷰는 2018~2021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2. 사회적 관습으로서 명절의 문화유산화

1) ‘설맞이풍습’과 인민의 생활문화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은 2012년 제도화된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2021년 2월에도 4건이 추가 지정되어 총 120여 건으로 추정된다.⁶⁾ 최초 문화유산보호법에 비물질문화유산 제도가 실시된 이후 민족유산보호법으로 개칭하여 2차례에 걸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서 제시된 분류체계에 맞게 조정되었는데, 명절이나 옷, 음식 등은 ‘사회적 관습, 예식 및 명절행사’에 해당된다. 그 외에는 구전전통과 표현, 전통예술과 의술, 자연과 우주 관련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예 기술이 있다. 그중 명절과 음식, 옷, 민속놀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총 43건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에 있어 성과가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중 ‘김치만들기풍습’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조선옷차림풍습’ 역시 지정받기 위해 신청을 했을 정도로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중 인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야는 4대 전통명절의 지정과 그것의 문화유산화이다. 전통명절의 지정과 휴일화는 북한 사람들의 생활패턴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기존 사회주의 명절은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비롯해 국가의 건립과 군대의 창건을 비롯한 각종 기념일이 21일 정도로 매우 많은 편이었다.⁷⁾ 이 중 태양절과 광명성절과 같이 중요한 날은 휴일로 지정되어 매년 반복되는 사회주의 의례

6)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 새로 등록,” 『로동신문』, 2021년 2월 2일.

7) 2018년 조선출판물수출입사에서 생산된 달력 참고.

로 주민들의 일상에서 비중이 큰 편이다.

북한에서 전통명절의 지정은 기존 사회주의 기념일 중심의 휴일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곧 사회주의 의례의 의무감이 없는 휴일을 만들어 낸 것이다. 기존 사회주의 기념일은 주민들로 하여금 특정한 사건을 기념하거나 기억해야 했으며, 그러한 기억을 정치화시켜 집단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의례의 동원이 뒤따랐다. 가령,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에 학생들은 대규모 행진과 공연을 위해 2~3달을 준비하고 꽃을 바치는 이벤트에 참여해야 하며,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에 부녀자들은 충성의 노래 모임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공연해야 했다. 국제부녀절과 같은 기념일 역시 어머니들의 명절이자 혁명역사를 전유하고 유일적 영도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기 위한 이벤트들과 관련된다.⁸⁾ 반면, 전통명절은 양력설에 이루어지는 약간의 이벤트 외에는 온전히 휴일로 보내며, 가족과 친족, 이웃과의 시간 혹은 사적시간이 허용되는 기간이다. 1988년 추석의 휴일화를 시작으로 1989년에는 설, 추석, 단오, 한식이 4대 명절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단오와 한식이 중국 고사와 관련되어 고유명절에서 제외되면서 정월대보름과 청명으로 교체되었으며, 양력설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음력설도 점차 강화되어 민족고유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전통명절도 약 20여 년의 기간 동안 변동을 거쳐 형성된 산물이며, 그 과정에서 민족문화의 고유성의 담론이 중국이나 남한과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조정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 중 북한에서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설맞이풍습’과

8) 이지순, “기념일의 경험과 문학적 표상: 북한의 국제부녀절 기념의례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47집(2018), 225~266쪽.

‘추석명절풍습’, ‘정월대보름과 달맞이 풍습’이 지정되었다. 이것은 북한이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에 비물질문화유산 제도를 만든 이래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으로 개칭하고 수정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새로 수정된 법안에 ‘사회적 관습’ 분야를 보완하게 되면서 명절풍습을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사회적 관습은 특정 분야의 전통 기술이나 예능, 구비전승, 전승지식과 구분되는 카테고리로서 명절세시나 생활관습, 음식과 놀이 등을 포괄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음력설의 의미를 설명하는 ‘인민의 풍습’을 묘사하는 자료를 살펴보면 설에 이루어지는 관습들 특히 의례, 놀이, 음식 등이 차례로 제시된다.⁹⁾ 이것은 추석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명절에 이루어지는 고유문화를 옷과 음식, 놀이 등으로 세분화시켜 보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명절을 보내는 관습 속에 ‘아름다운 민족성이 짙게 어려있는 것’으로 표현되며, ‘민족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통해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로동당시대’를 밝혀준다는 정치적 언술로 이어진다.¹⁰⁾ 이러한 서술은 1990년대 김정일 정권에 의해 추진된 ‘민족성의 고수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발양’시키는 정책에서 지원되는 일관적인 서사이기도 하다.¹¹⁾ 그러나 여기서 설맞이풍습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양력설을 의미한다. 음력설은 사회적 관습으로서 1년의 전통적 세시 중 하나이자 전승문화로서 21세기에 창출된 명절이다. 양력설은 해방 이후부터 다른 사회주의 기념일과 함께 유일하게 설 수 있는 명절이었다. 그러나 고유문화로서 음력설은 2000년대 등장하여 2015년 비물질문화유산되는 과정을 거쳐 양력설과 혼성화되어 설맞이

9) “우리 인민의 설맞이풍습,” 조선중앙통신, 2021년 2월 10일.

10) 강류성, “민족문화유산을 길이 빛내여가시며,” 『통일신보』, 2020년 4월 6일.

11) 위의 글.

풍습이라는 문화유산으로 재구성되기에 이른다. 이로써 음력설까지 휴일화되면서 주민들은 두 번의 설을 쇠는 이중과세(二重過歲)를 국가에 의해 제안받게 되었지만, 실제 주민의 생활문화에서는 양력설이 이미 관습화되어 현실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유문화와 실제 생활문화와의 불일치가 국가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음력설에 재현되는 민족정서의 문화적 경관은 실제 인민의 생활보다는 미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져 갔다. 비록 해방 이후 50년 이상 양력설을 쇠고 있지만, 음력설은 민족문화의 연속성을 부여받기 위해 꾸준히 반복되면서 고유문화이자 현재에도 전승되는 문화로서의 의미로 재생산된다. 음력설에 조선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는 어린아이들을 ‘민족의 넋’으로 민속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민족의 정서’가 충만한 것으로 재현한다.¹²⁾ 이날 미디어에서는 평양을 비롯해 각 도시의 광장에서 펼쳐지는 설잔치 이벤트를 통해 ‘로동계급과 인민들에게 희열과 랑만을 안겨준다’¹³⁾고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북한 인민들이 명절날 조선옷을 입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명절의 조선옷은 TV나 신문에서 보도되거나 행사에서 볼 수 있는 의상이다. 오히려 조선옷은 태양절이나 광명성절과 같은 사회주의 명절에 중요한 행사에 참여할 때 그리고 여성이 결혼식 때 입는 복장이며, 여대생이나 문화시설의 안내원들이 입는 복장이다. 그리고 광장에서 재현되는 민속놀이의 풍경은 도회지에서 기획되는 프로그램이지 보통의 가정에서는 TV를 보거나 주패놀이로 불리는 카드놀이가 더 일반적인 놀이이기도 하다. 그보다 설풍습

12) “민속명절에 넘치는 아름답고 고상한 정서,” 『로동신문』, 2003년 2월 2일.

13) “거리와 마을에 차넘치는 설명절의 환희,” 『로동신문』, 2017년 1월 29일.

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조상의례는 공식적인 보도에 거의 묘사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봉건성을 함의하고 있는 조상의례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다. 조상에 대해 인사하는 정도로 허용되나 차례상을 차려서 절을 하는 방식은 허례허식으로 치부된다. 그러나 실상은 북한 주민들이 가장 왕성하게 설을 보내는 방식 중 하나가 조상을 위한 제사상을 크게 차리고 이를 가족끼리 나누어 먹고 노는 일이다. 특히, 시장화 현상 속에서 오히려 조상의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신기한 것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불안정해지자 사람들은 국가에서 나눠주는 공급물자에 상관없이 제사상들이 더 커지고 화려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조상묘를 잘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제사상을 날 차려서 기울어져 가는 국운으로 불안한 집안의 기운을 바로잡아보려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국영상점들은 파리만 날리고 있지만 지역들에 등장한 농민시장들에선 술과 고기와 과일과 생선들이 밀려들고 사람들은 국가가 적극 통제하는 자본주의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제수용품 사들이기에 여념이 없었다(필자 강조, 이하 동일).¹⁴⁾

(설날 차례상 질문) 황해도는 명절 때라도 많이 해 놓고 많이 먹자는 쪽이니까. 우리는 명절 때 통돼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돼지를 잡아서 겨울에는 설을 계기로 큰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머리를 따로 나중에 먹으려고 매달아 놓고 그리고 갈비도 이만큼 크게 잘라서 삶아서 제사

14) 이애란, “북한 추석, 제사 잘못지내 불운 닥칠라... 장마당 분주,” 『통일한국』, 제310권(2009), 77쪽.

상에 놓고, 풍성하게 차려서 조상들한테 인사를 해야 한 해 일이 잘된
다고 해서 제사상을 엄청 잘 차렸어요(황해남도 출신, 1971년생 여성).

사회적 관습으로서 명절풍속의 비물질문화유산화는 필연적으로 실
제 인민의 생활과 탈맥락화된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 설은 점점 민족
문화의 전승을 담보한 중대한 명절로 인정받아 휴일화되었으며, 지배
이데올로기와 연동되는 내러티브로 재현되고 있다. 그러나 인민들의
생활문화에서 설의 의미와 가족 간 느슨하게 놀고 먹는 날이자 조상
의례를 통해 가족과 친족 간의 애착을 보여 주기도 한다. 양력설에는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거나 신년사를 경청하는 사회주의적 의례가 뒤
따르고 있지만, 상류층을 제외한 보통의 인민들은 가족 간에 음식을
나누어 먹고 노는 일이 주된 일상이기도 하다.

이로써 비물질문화유산화된 설명절은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일상화,
매년 반복되는 세시로서 순환되고 있다. 동시에 그것의 가치와 의미는
권위화되어 민족문화의 진흥이 체제이데올로기와 정권의 연속성에 부
합되도록 서사화되고 있다.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서 제안된 고유한 민
족성이라는 상상된 공동체는 당기관지와 교양, 학습, 박물관, 직장과
인민반 단위의 주민교육 현장에서 전파되고 있지만, 주민의 생활세계
에서 추상화된 이념적 미션과 사회적 의무감은 술잔치와 조상의례라
는 비사회주의적 풍경과 혼종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에게 전통
명절이 주는 의미는 사회주의 명절과 구분되는 진짜 명절 같은 날의
경험이며, 그것의 원천은 기념해야 할 역사와 정치의 의무감에서 벗어
나 음식과 술을 가장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가족과 친족, 이웃 간의 잔
치로 소비되기 때문이다.¹⁵⁾ 이로써 비물질문화유산으로 권위화된 설
명절풍속의 가치와 의미는 당국에 의해 교양사업이자 애국사업으로

계몽화되는 동시에 보통의 인민들은 동원으로부터 느슨한 시간을 보내는 현대적 세시풍속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단오의 배제와 ‘추석명절풍습’의 문화유산화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전통명절에서 중요한 변화는 단오의 배제와 추석의 강조이다. 추석은 성묘를 중심으로 하는 인민들의 조상의례 관습이 강했던 명절이었다. 반면 1989년 부활된 단오는 직장단위 놀이가 중심이 된 명절로서 협동농장과 시군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단오명절을 지내는 방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¹⁶⁾ 2002년 기사에 의하면 평양에서는 “시내 공장, 기업소 로동계급도 만경대유희장, 쑥섬유원지와 일터들에서 자력생생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난관과 시련을 헤치며 강성대국의 래일을 향해 나아가는 궁지속에 민족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를 진행하였다”라고 보도하고 있다.¹⁷⁾ 곧 2000년대 초반까지 단오명절 쇠기는 설과 추석을 포함해 중요한 전통명절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씨름과 그네뛰기, 윷놀이, 활쏘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가 단오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당국에서는 추석에 비해 단오의 진흥에 더욱 무게중심이 실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비해 추석은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조상 성묘하는 날로 인식되어 당국에 의한 진흥정책과 다소 부딪치는 측면이 있었다. 북한 당국의 인식에서 조상의례는 최소한의 방식으로 허용하나 과대한 음식

15) 권혁희, “이데올로기, 조상의례, 술판과 주패놀이: 현대 북한 명절문화의 수행적 전환에 관한 소고,” 『북한의 민속』(서울:민속원, 2020), 182쪽.

16) 성필창, “민족경기와 민속놀이를 단오를 즐겁게,” 『로동신문』, 1989년 6월 9일.

17) “도천리의 단오명절,” 『로동신문』, 2002년 6월 16일.

을 차리고 절을 하는 허례허식에 대해서는 극복해야 할 생활양식이라고 주장한다.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재현된 단오는 전통사회와 마찬가지로 힘든 농번기 모내기를 마치고 놓고 먹는 명절로 복원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상의례의 의무감 없이 가족과 직장 동료, 이웃들과 놀이와 휴식, 음식을 즐기는 명절로서 단오는 즐거운 명절로 묘사된다.¹⁸⁾

탈북자들의 구술에서도 단옷날에 대한 기억은 단체로 운동을 하거나 유희를 즐겼던 것으로 기억된다. 평양에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동강변으로 가족단위나 친구끼리 소풍을 나가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단오쇠기가 생겨남으로써 이날 조상묘를 돌보거나 조상의례를 하는 집도 생겨나는 등 새로운 생활문화의 변화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단오의 명절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대외적인 정치적 관계 속에서 고유한 민족문화의 위치를 상실하게 된다. 2005년 남한에서는 강릉의 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혹독한 원조 논쟁을 겪게 된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중국과의 악화된 관계 속에서 단오를 점차 지우고 이를 대체할 명절을 찾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북한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단오는 정권에 의해 고유의 명절로 공식화된 지 20여 년 만에 다시 외래문화로 주변화되었으며, 공식적인 문헌에서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단오의 명절 철회는 자연스럽게 중국 고사와 연관된 한식의 위치도 변경하게 된다. 단오와 한식에 대한 고대 시기 문헌기록이 중국에서 연원한다는 것을 통해 고유문화로서의 위치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이

18) “우리의 것이 제일 좋아,” 『로동신문』, 2003년 6월 4일.

것은 남한의 단오를 고유 명절로 간주하고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한 것과 비교하여 전통문화의 계승에 대한 정통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추측된다. 분단 이래 일제와 미제의 민족문화유산 약탈을 방조한 남한 대신 자신들이 민족문화 계승의 적자로 인식해 온 것과 연관될 것이다. 그 대신 한식과 거의 날짜가 일치하는 청명이 명절화되고 단오는 정월대보름으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조상의례나 친족과 모임 등이 없는 정월대보름보다는 북한 주민들에 의해 지속되어 왔던 추석이 더 중요한 명절로 부각되며 정책적 집중이 이루어진다. 단오를 대신해 추석은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기는 명절로서 창출되어 현재를 이어오고 있다. 기존 단오에 했던 대항소씨름대회를 추석에 옮겨 개최하고 있으며, 널뛰기와 그네뛰기 경기를 비롯해 탈춤과 무용과 같은 각종 전통문화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추석은 다음 기사와 같이 민족성의 총화를 담은 명절로서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내재하고 있는 명절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온정속에 민속명절인 추석을 맞으며 진행되어온 전국적인 민족씨름경기가 올해에도 룡라도의 민족씨름경기장에서 12번째의 년륜을 새기며 성황리에 펼쳐져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중략) 올해의 광범한 대중의 적극적인 열의속에 그네뛰기, 윷놀이, 활쏘기를 비롯한 민속놀이와 민속무용 “봉산탈춤, 돈돌라리, 민요 도라지, 룡강기나리, 신고산타령, 윷칠공예, 초물공예, 조선불고기가공법, 상차림법 등 수십개의 대상을 국가비물질문화유산 혹은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심의평가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책임부원 한영일동무의 이야기를 통

하여서도 전국가지의 근로자들속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재부에 대한 긍지와 사랑이 더욱 강렬해지고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고 있음을 가슴뿌듯이 느낄 수 있다.¹⁹⁾

위 기사와 같이 추석은 개별 가정에서의 조상의례가 중심이었지만 각종 민속놀이와 전국단위 씨름대회를 추석으로 옮김으로써 보다 전통명절로서의 의미가 강조된다. 그리고 명절풍습에 부합되는 민속놀이와 무용, 민요, 음식 등은 비물질문화유산을 위한 대상으로 선택되고 있다. 특히, 단오의 몰락과 추석의 부각은 민족 고유성의 위치가 이데올로기적 필요에 따라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단오에 대한 추석의 역전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는 명절로서 창출될 필요를 제기하게 된다. 조상의례를 간소화 방식으로 허용하게 된 북한이 보통 인민의 제사상까지 관대했던 것은 아니었다. 조상묘소에 헌화를 하고 허리를 굽히는 정도를 모범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은 가족과 친족 단위의 조상의례를 사회주의화하는 또 다른 의례의 샘플을 제안하기도 한다. 『로동신문』을 비롯해, 『천리마』와 『조선녀성』, 『민족유산』과 같은 잡지를 통해 추석의 정치, 문화적 의미화가 재생산되고 있다. 가령, 추석이 조상의례를 위한 명절인 것에 착안해 집단적으로 혁명열사능을 참배하는 문화를 창출해 내기도 한다. 추석에 조상 묘소를 찾듯 혁명열사능 방문을 독려하여 혁명역사의 전사들을 기념하는 국가적인 기념일로서 추석의 의미를 동조시키고 있다. 나아가 혁명역사와 동조되는 추석의 에피소드는 일제시기를 민족적 억압의 시대로 재현하며 항일무

19) “추석날과 더불어 꽃피는 우리의 민속전통,” 『로동신문』, 2015년 9월 27일.

장 투쟁의 역사를 혼입시킴으로써 총대로 결사옹위하는 체제수호의 담론으로 환류시키고 있다.

년년이 찾아 오는 추석명절이건만 올해의 추석을 맞은 우리 인민의 마음은 다르다. 민족사에 특기할 올해의 사변들을 되새겨 보며, 오늘을 위해 당과 수령께 충성을 다한 혁명선렬들과 선배들, 먼저 간 이들을 추억하며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우리 인민이다. (중략) 꽃송이를 안고 대성산혁명렬사릉으로, 애국렬사릉으로 향하는 사람들, 조상들과 동지들의 묘소를 찾는 사람들, 민속전통을 장려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 온 우리 당의 은정속에 추석을 맞은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생겨 난 많은 특별로선들로 뺄스들이 경쾌하게 달리고 특색 있는 명절단장을 한 봉사매대들도 문을 열었다. 추석명절날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이 함께 간 곳은 대성산혁명렬사릉이다.²⁰⁾

이와 같이, 단오의 명절철회와 추석의 비물질문화유산화는 북한에서 민족문화의 재구성이 어떠한 방식과 방향을 향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 1967년 이래로 봉건잔재의 청산 아래 추석의 조상의례가 수면 아래 잠복해 있다가 1980년대 후반 전통명절의 지정과 휴일화는 조상의례의 활성화를 가져다주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상의례 전면화는 그동안 국가가 일부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들 내부에서 성행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을 지나 2000년대 중반 기근을 벗어나고 시장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추석상은 훨씬 화려해지고 있다. 단오 때 이루어지던 조상의례나 씨름대회, 각

20) 오철룡, “유구한 민속전통이 활짝 꽃 피난다,” 『로동신문』, 2002년 9월 22일.

종 야유회와 민속놀이는 추석으로 옮겨지면서 제2의 명절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덧붙여, 남한과의 극명한 차이는 사회적 관습으로서 명절을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는 점이다. 남한에서 무형문화재는 인간문화재라는 별칭에서 보여 주듯이 특정한 예능과 기술의 보유자를 지정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었다. 2020년 개정된 무형문화재보호법에서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이 추가되는 등 유네스코인류무형 문화유산의 카테고리라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명절은 전통적 시간체계에 의해 형성된 문화로서 이 시기에 공동체적인 의례와 놀이, 음식 등의 특성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 명절의 문화유산화는 검토는 특정 보유자와 단체의 지정이 아닌 인민의 생활문화의 전승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그 전승은 당국과 사회 각 기관들에 의해 추동되는 진흥과 창출의 결과가 혼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선옷과 민족음식의 문화유산화

1) ‘조선옷차림 풍습’의 비물질문화유산 지정과 일상에의 적용

흔히 남한에서 한복으로 불리는 전통복장은 북한에서 조선옷으로 불린다. 조선옷은 북한이 2012년 비물질문화유산 지정제도를 실시한 바로 그해 지정된 목록으로 이미 북한 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사실 조선옷입기는 1980년대 후반 전통명절 복원과 함께 시작된 프로젝트로 이 무렵부터 사회 곳곳에서 조선옷에 대한 역사의 탐

구와 복원, 장려와 실생활의 적용이 왕성하게 나타나게 된다. 1990년 전후 남북교류 당시 북한을 다녀온 남한 인사들이 한복을 입은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인상을 언급하고 있듯이 이 시기부터 북한에서는 박물관, 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과 상점, 호텔 등에서도 조선옷을 입게 된다. 조선옷은 인민들의 실생활에 적용되어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분야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치마저고리는 고대시기부터 내려온 전통 민족옷으로 표현되는데, “치마저고리를 자기 몸의 한 부분으로, 민족성의 상징”으로²¹⁾ 강조되고 있을 정도이다. 조선옷의 중요성은 아리랑과 김치 만들기에 이어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에서도 나타난다. 2020년 북한에서 신청한 ‘조선옷차림 풍습’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지는 못했지만 향후 등재되기 위한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12년 비물질문화유산 제도를 법제화했던 배경도 과거 조선민족제일주의 단순한 연장선이 아니라 유네스코 체제를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기준의 문화유산 체계를 구상해 왔던 것이다.²²⁾ 법적 제도화 초기 비물질문화유산 제도를 민족적 긍지와 애국심을 더해 주는 제도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보다 풍부히 하고 그 지속적 발전을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으로²³⁾ 선언하고 있어 글로벌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21) “민족성의 상징 조선치마저고리,” 조선중앙통신, 2020년 11월 24일.

22) 오철룡, “비물질문화유산보호와 인류문화의 지속적발전,” 『로동신문』, 2013년 3월 24일.

23) “활발히 진행되는 비물질민족유산보호사업,” 『로동신문』, 2014년 1월 19일.

이와 같이 세계평화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준에 부응하는 정상 국가로서의 면모와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한 정책적 성과로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제도의 수용은 필연적이었다. 이를 위해 비물질문화유산 관련 법률을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충해 나가면서 보다 탄력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춰 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치마저고리차림풍습’이 ‘조선옷차림풍습’으로 건넵이것 담그기는 ‘젓갈문화’로 고키거나 ‘고전시간침법’을 ‘침 치료법’에 새로 포함시킨 것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조선옷차림풍습의 하위 카테고리로 조선치마저고리 외에 ‘녹의홍상(綠衣紅裳: 초록색저고리와 다홍치마)’을²⁴⁾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관습과 예식’, ‘전통수공예기술’ 분야가 2015년, 2019년 비물질문화유산 관련 법률의 보완에 반영된 것으로, 이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2003)의 카테고리를 참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조선옷차림풍습’ 역시 지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들을 체계적으로 통합시키고 유네스코에서 카테고리화한 방식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 맞춰나가기 위해 용어를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이러한 국내외적인 대응을 통해 비물질문화유산을 체계화시켜 나가는 북한의 정책은 조선민족의 문화를 대내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글로벌한 수준으로 드러냄으로써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입체적인 국제정책과 연동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옷을 여성에 한정시키는 관행을 2015년 전후부터는 서서히 무너뜨리고 남성의 한복이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최근 전통의 전면적인 부활이 남성의 조선옷을

24) 이승현, “북, 24절기 풍습·회령 백살구 등 6가지 비물질문화유산 등록,” 통일뉴스, 2020년 1월 6일.

점차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젠더 이분법을 나름대로 다소 완화하고 있지만,²⁵⁾ 남성들의 영역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대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더디거나 매우 협소한 부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 보다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갖추는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조선옷차림풍습은 인민의 일상과 국가의 민족문화 계승의 명제가 적절하게 타협해 가며 조정되는 국면을 보여 준다. 조선옷은 기존 서양 정장을 대신해서 국가의 공식적인 기념일이나 선거, 지역의 정치행사나 환영회와 같은 대중이 집합하는 현장의 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다. 나아가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의례복으로 선택되어 거의 관행화되어 가고 있다. 물론 여전히 남성은 양복을 입고 여성이 조선옷을 입는 형태이긴 하지만, 조선옷이 빠진 결혼식은 상상할 수가 없다. 조선옷은 북한식 사회주의 의례의 일체화된 표상이자 민족적 정체성의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인 2010년 전후에는 중국과의 교역의 증가로 화려한 여성복이 다수 수입되었으며, 북한 여성들의 옷차림이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을 우려하는 대상이 될 정도이다. 그런 점에서 복장문화는 북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조선옷의 컬러와 패턴 역시 젊은 여성들의 패션 취향을 반영하며 변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여성들에게 조선옷은 미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의복으로서 의례를 위한 복장으로서 수용되고 있었다.

25) 박민주, “김정은 시기 조선옷 전통 재구성,” 『현대북한연구』, 제23권 1호(2020), 242쪽.

선거 때는 뭐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선거하잖아요, 뭐. 공식할 때도 무조건 저고리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때 또 저고리 입으라고 그러냐면 내가 뭐 표창장 탈 때나 그런 건 어찌다 한 번씩 있지만 그다음에 뭐 사로청에서 내가 당원이 된다. 이럴 때도 저고리 입어야 되고 무슨 강연회 할 때도 뭐 강연회 참가할 때도 제일 그 어떤 때는 저고리 입으라고 그러고 그다음 예술 공연 할 때도 저고리 입으라고. 그러니까 저고리를 필수품이었어요, 저고리가. (여성들이 조선옷 입는 것을 좋아하나요?) 입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거 입기를. 그리고 막 꽃바구니 증정하러 갈 때도 저고리 입고 간다 말이에요(강원도 출신, 1974년생 여성).

위의 탈북자의 구술처럼, 조선옷은 중요한 의례에 입어야 되는 여성들의 공식적인 정장으로 인민들의 일상에서 자리 잡아 갔다. 이는 민족성의 발현과 전승을 위한 위로부터의 요구와 함께 평상복보다 색감이 있는 조선옷은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미적 취향을 반영한다. ‘당국이 장려’하는 이유 외에도 평소 입을 수 없는 ‘화려한 저고리’는 젓빛, 국방색을 대체하는 아이템으로 거부감 없이 수용되고 있다.

일상 평상으로 볼 때 입는 옷들 보면 다 뭐 젓빛, 회색, 국방색, 까만 거 이런 옷밖에 입는 게 없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게 그래도 저고리다 말이에요. 이제 조선저고리라고 민속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저고리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도 당국에서도 저고리를 많이 입고 다니라고 장려를 해요, 무조건 입으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도 무조건 저고리를 입으라고 뭐 조그만 크고 작

은 행사라도 저고리 입으라고 많이 장려하기 때문에, 저고리 입는 거
를 그제 북한 사람들한테는 어딘가 모르게 일상이 돼 버렸죠, 그제(강
원도 출신, 1974년생 여성).

위의 구술처럼, 치마저고리는 바지를 입으면 단속이 되는 제한된
현실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품위 있고 아름다운 의복으로 선택되고
있다. 이러한 옷차림과 같은 사회적 관습의 문화유산화는 명절풍습과
마찬가지로 남한과 다른 문화재지정의 관성을 보여 준다. 일상에서 유
리되었던 조선옷을 국가적인 기념일과 결혼식과 같은 일생의례에 활
성화시키고 경공업성, 조선옷협회, 대학에서 조선옷 디자인을 개발하
는 등의 다양한 진흥정책은 북한 특유의 일사분란한 정치의 일면을
드러낸다. 남한의 무형문화재법도 2020년 개정 이후 유네스코 체제를
반영하는 전통지식과 ‘절기풍속, 의식주와 전통적 생활관습’을 포괄하
고 있다. 가령, 김치 담그기와 장 담그기, 온돌문화 등이 근래 국가무
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는 체계로의 변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직까지 북한의 설명절풍습
과 같은 넓은 범위의 사회적 관습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
지만 남한 역시 기존의 분류체계의 관점에서 점차 변화되고 있는 추
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민족음식’의 창출과 문화유산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전통명절에 조선옷을 입고 민
속놀이를 하며, 명절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과 그러한 음식의 전승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세시에 맞는 음식인 절식(節食) 외에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음식도 민족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분야로 설정하고 있는데 주로 고난의 행군 이후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사회적 실천으로 확산되는 2000년대 초반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조선옷과 마찬가지로 민족음식은 인민으로 하여금 널리 보급하고 진흥시켜야 할 프로젝트로 착수된 것이다. 이로써 명절-옷-음식으로 순환되는 민족문화의 창출이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 초반 북한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 사회적 활기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지방토배기음식'의 발굴과 진흥이었다. 『로동신문』을 비롯한 다양한 잡지 기사를 살펴보면, 2002년을 전후한 시기 이후 평양, 개성을 비롯해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강원도 등의 지역음식에 대한 소개와 이에 대한 조리법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숨겨진 것들에 대한 의미부여와 새로운 창출은 지도자의 언술에 의해 더욱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선조들이 창조한 전통적인 민속음식을 빠짐없이 찾아 내어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인민들이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문명하게 하는 데서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애국애족의 정신을 심어주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 민속요리를 발전시키는 데서 도별로 자기 지방 토배기요리의 특성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방토배기요리의 특성을 잘 살려나가자면 해당 지역에서 오래동안 살아온 늙은이들을 적극 계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우리는 선조들이 창조한 민속음식들을 우리 대에 빠짐없이 찾아내고 시대적 요구와 미감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온 나라에 민족의 향취가 흘러넘치게 하여야 합니다.²⁶⁾

위와 같이 지역 토속음식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는 조선옷과 마찬가지로 당국과 지방의 도단위기관, 사회단체 등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었다. 조선옷 진흥을 위해 전시회가 개최되었다면, 민족음식의 진흥은 경연대회와 품평회가 매년 개최되었다. 이러한 지방 토박이 음식의 진흥정책은 지역 음식을 국가적이고 민족문화로 발굴해 내기 위한 프로젝트로 확산시켜 필연적으로 비물질문화유산의 양적 팽창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비물질문화유산의 지정에 있어서도 조선옷이 여성의 치마와 저고리로 한정된 지정에 머물렀다면, 음식은 일상식에서 명절에 먹는 절식과 지역의 향토음식을 포괄하여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음식의 지역적 분포와 전승의 범위를 고려하여 국가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는 음식들 역시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었다.

실제로 2012년 이후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분야가 음식문화 분야이다. 비물질문화유산 등록제도가 시행된 2012년을 시작으로 ‘김치만들기, 막걸리 담그기, 장 담그기, 평양랭면’이 등록되었으며, ‘썩떡만들기, 룡두지짐풍습, 과줄가공법, 동지죽풍습’을 비롯해,²⁷⁾ 2017년 이후에는 ‘함경도 단고기장(보신탕)’, ‘함흥 농마(감자녹말)국수’와 같은 지역 토속음식이 지정되고,²⁸⁾ 그해 명태매운탕, 송농과 같은 일상에서 먹는 보통의 음식들도 지정되었다.²⁹⁾ 2018년에는

26) 김정일, 『민족문화유산과 민족적 전통에 대하여』(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237~244쪽.

27) 김옥경, “민족의 우수한 비물질문화유산들,” 『천리마』, 제8호(2016), 94쪽.

28) 이승현, “북, ‘견우직녀 전설’ 등 13개 비물질문화유산 새로 등록,” 통일뉴스, 2017년 1월 9일.

29) 이승현, “‘가야금 제작기술·송농 등 국가비물질 문화유산 등록,” 통일뉴스, 2017년 5월 19일.

‘추어탕’과³⁰⁾ ‘고려약 음식요법’, ‘건뎡이젓 담그기’, ‘자라료리’³¹⁾ 등이 추가되고 2019년에는 전골, 감주, 두부앗기 등이 추가되었다. 특히 추어탕은 개성지방의 유명한 특산음식으로 알려져 있으나 김일성이 개성에서 먹게 되면서 이에 대한 의미부여가 커지면서 국가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³²⁾ 또한, 분포 범위가 한정된 경우에는 대부분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2017년에는 황해북도에서 먹는 ‘남새절임음식인 정방채’, 함경북도 길주군, 명천군을 비롯한 북부지방 사람들이 영채를 가지고 김치를 만드는 ‘영채김치만들기’가 지정되었다. 전자는 조선민족의 식생활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후자는 “조선김치의 다양성과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³³⁾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성과의 도출은 토속적인 지방의 음식들을 발굴해서 전문식당을 중심으로 진흥시켜 나간 정책을 통해 가능할 수 있었다. 명칭에 있어서도 민족음식은 전승문화의 의미를 담은 민속음식으로 나타나거나 전문식당에서 메뉴화되거나 좀 더 고급스러운 의미를 담은 ‘민족료리’로 표현되기도 한다. 특히, 요리경연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한 메뉴가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민족음식 발굴사업의 일환인 지방토박이 음식의 강조는 사

30) 리광훈,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추어탕,” 『조선여성』, 제10호(2018), 55쪽.

31) 이승현, “고려약물 찜질, 고려약 음식요법 등 비물질문화유산 등록,” 통일뉴스, 2018년 10월 28일.

32) “맛있고 영양가높은 민족료리,” 『로동신문』, 2019년 4월 21일.

33) “20여개 대상이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 『민주조선』, 2017년 11월 7일, “날로 풍부해지는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 『민주조선』, 2018년 10월 24일.

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 오면서 나타난 북한 정권의 대응 중 하나 일 수 있다. 산과 들에서 나는 채소를 활용한 음식과 같이 토속적인 음식문화의 전승을 민족음식화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과 련이은 흑심한 자연재해로 나라형편이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도 우리 식의 음식문화를 더욱 다양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은정어린 조치들을 치해 주시였다. (중략) 우수한 민족음식을 기본으로하여 음식문화를 발전시켜 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에 맞게 전국 각지의 이름난 민족음식들이 적극 발굴장려되고 있다.³⁴⁾

그리고 그러한 발굴과 장려를 전국적으로 전파하는 역할로 각지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800여 개의 ‘민족음식봉사망’을 들 수 있다. 도 단위와 시군 단위의 직영 식당으로 이들 기관은 “기본품종만 하여도 수천 조에 달하는 이름난 조선료리들이 봉사됨으로써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분돋아 주고 있다”고³⁵⁾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 식당의 네트워크는 전국단위 음식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작동하며 다양한 전문기관들과 협업하는 형태를 보여 준다. 특히, 조선료리협회는 전국민족음식전시회를 주최하여 평양의 중앙 기관은 물론 각 도 단위의 대표 식당의 경연대회를 조직화하여

34) “각지에서 적극 장려되고 있는 민족음식문화,” 『로동신문』, 2002년 10월 28일.

35) “800여개의 민족음식봉사망 운영,” 『로동신문』, 2004년 12월 26일.

우수한 민족요리를 선발하고 이를 비물질문화유산과 연계시키는 작업을 진행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전문가 집단의 발굴과 진흥과정에서 북한의 지역음식은 국가와 민족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그리고 역으로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보급되는 창출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³⁶⁾ 대표적으로 ‘태양절요리축전’을 들 수 있는데, 이 대회는 1993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에 처음 개최된 이래, 조선료리협회 산하 지역 요리협회와부문 협회의 수십 개 단체가 매년 참가하여 새로 개발한 요리 및 특산요리 등을 선보이며 지방 특산음식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북한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요리대회로 성장했다. 또한, 태양절의 경연대회와 함께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전국민족음식 전시회 역시 조선료리협회와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전시회로서 인민봉사 부문, 대외봉사 부문, 각 도(직할시)의 150여 개 단위에서 만든 1000여 점의 민족음식들이 출품되었다.³⁷⁾

그러나 북한의 다양한 조직과 기관에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진 실행과 주민들의 일상은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업의 중요성은 미디어에 의해 전달되고 환류될 뿐이며 직접 담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의해서 추동되어 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탈북자의 구술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민족요리를 진흥에 대한 인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언제 그런 거 할 새도 없었고 그런 거는 그걸 전문하는 식당들이 있거든요. 그 고유한 자기 민족의 음식들을 하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런 식당들에서 거

36) 권혁희,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의 변화와 특성,” 223쪽.

37) “전국민족음식전시회 진행,” 『로동신문』, 2015년 11월 28일.

발해서 잘하고 그 사람들이 요리경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조선민족제일주의라고 해서 조선음식, 민속놀이 진흥과 같은 정책이 직접 생활에 적용되는 게 있었나요?) 네. 그런 거는 우리 민속을 살리고 그다음 영화에서도 이렇게 옛날 민속영화를 많이 하고 이런 거는 참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처럼 음식을 뭐 특히 민족음식이라고 뭐 해 가지고 거기에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한마디씩 그저 던질 뿐이지 거기에 귀 기울이려고 절대 안하고 자기 딱 부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하겠지요. 그 사람들은 뭐 당에서 하라니까 집행을 해야 되니까 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지배인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많이 하지만 우리 같은 뭐 그 분야가 아니니까 그런 데 크게 머리를 쓰거나……(평양 출신, 1958년생 여성).

위의 구술처럼 민족음식 진흥은 집행해야 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프로젝트이며, 비물질문화유산화되는 음식 등 일부는 도시의 전문식당에서 메뉴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 민족음식의 비물질문화유산화 과정은 남한에서 1988년 전후 시기 발전된 향토음식의 상업화 과정을 연상시킬 수 있다. 올림픽을 대비해 지역 음식을 경연대회화시켜 전통음식으로 창출해 내는 과정에서 전주비빔밥을 비롯한 전국을 향토음식이 1990년대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데,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민족음식 진흥 과정은 유사한 형태를 보여 준다. 남한에서 이들 음식이 철저히 상업화되어 지역 관광과 연계되는 특성을 보여 주었듯이, 북한도 일부 식당에서는 전통음식이 메뉴화되어 보급되었으며 민속거리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음식으로 개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비물질문화유산화 과정은 전혀 다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사회관습 분야인 명절에서도 전승문화의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특정하는 남한의 관행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듯이, 음식문화도 일상의 전승성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령, 2017년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명태매운탕’이나 ‘승냥’은 일반 가정에서 먹는 일상음식으로서 특정인이 지정될 수 없는 분야가 대부분이다. 물론 그중에는 ‘단군술양조기술’과 같이 특정인에 의해 개발되고 진흥된 사례가 있지만 ‘두부앗기’나 ‘떡국 만들기’와 같이 보통의 인민들에 의해서 전승된 음식문화를 지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에서 ‘김치 담그기’와 ‘장 담그기’와 같은 변화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다수의 음식은 특정 지역과 전수자가 특정된 전통주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남북한이 유네스코 체제에 부합되는 분류체계를 선택하며 국가지정제도를 실행하고 있지만 그것의 적용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은 1980년대 후반 이래 지속되어 2000년대 정착되어 간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김정은 정권 이후 내부적 문화정치에서 글로벌한 수준으로 확산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0년대 후반 국가비물질문화유산을 대거 지정할 수 있는 배경 역시 1990년을 전후로 진흥시켰던 전통명절, 조선옷, 민족음식 분야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 분야를 중심으로 구비전승 분야와 고려의학과 같은 전통지식, 민요, 탈춤, 농악 등의 전통예술을 포함시키며 양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으며, 관련 교과목의 대학강좌 개설, 민족

유산보호기금설립과 디지털아카이브화 등을 통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국가 주도의 강력한 프로젝트의 영향 속에서 인민의 일상적 실천은 북한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 준다. 사회주의 기념일 중심의 휴일체계에서 전통명절의 휴일화는 당국의 의도와 달리 조상의례의 활성화를 가져왔으며, 시장화 현상과 함께 고급술과 좋은 음식으로 성묘상을 경쟁적으로 차리는 소비문화도 나타나게 되었다. 조선옷입기 진흥정책도 여성들을 중심으로 정착되어 사회주의 의례와 결혼식과 같은 일생의례를 위한 복장으로 수용되었으며, 치마 중심의 여성 패션 코드 그리고 컬러풀한 색감은 여성들의 미적 취향을 반영해 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장화 현상 속에서 단조로운 색과 문양에서 화려한 하이패션으로 진화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당과 관련 사회단체들에 의해 생산되는 민족문화의 상징과 정수로서 명절의 의미와 조선옷의 가치는 점점 증폭되어 갔다. 전통명절뿐만 아니라 24절기마다 신문에는 해당 세시풍속을 열거해 가며 보도하고 있으며, 설과 추석에는 민속놀이와 전통체육 경기가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다. 민족음식도 마찬가지로 경연대회와 품평회의 개최를 통해 각 지방의 음식들이 민족요리로서 개발되고 일부는 메뉴화되어 도시의 식당에서 판매되었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서 비물질문화유산은 국가적 사업으로서 정치적 수행의 목표가 있는 동시에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의무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창출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수행하는 인민의 실천은 그것을 공식적인 미디어에서 강조하는 정치적 의무감에 따른 수동적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전통명절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부합되지 않는 기존의 문화적 관성과 고난의 행군 이후 가속

화된 시장화의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선민족제일주의나 비물질문화유산과 같은 권위적 언술 역시 인민의 차원에서 휴일의 여가와 음식의 소비, 조상의례의 실천과 같은 생활문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 이것은 북한 인민들이 국가의 의해 제시되는 권위적인 담론을 그들 나름의 문화적 관행과 삶의 방식으로 수용하거나 조정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제도 자체가 가진 권위와 정치성의 이슈는 남한 사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역사적 과정에 의해 제도화 되었지만, 민족문화의 전승에서 인류문화의 다양성으로 진화되어 가는 의미의 재구성에서 남북은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 교류와 민족 동질성의 확인,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 이자 이슈메이커로서 문화유산 제도는 매력적인 수단일 것이다. 오히려 무형문화유산 제도 운영에 있어 신생국인 북한의 방식은 남한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과감하고 파격적이다. 가령, 음식문화에 있어서 특정 음식에 대한 보유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정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인민의 생활 전반에 있는 음식문화를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송늬이나 두부앗기, 수정과, 약밥 등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그 범위가 전국가적이면 국가지정으로 영채김치처럼 한정된 지역의 음식이면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남한 역시 김치나 장 담그기와 같은 일부 음식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며 점차 살아 있는 생활문화와 연결되고 있으나 여전히 특정한 기술과 예능, 전승집단과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향후 유네스코 체제의 영향 속에서 남북의 무형문화유산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를 주목해야 하는 한편, 상호 간의 비교연구와 협력은 연구자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10월 28일 / 수정: 12월 7일 / 채택: 12월 10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김정일, 『민족문화유산과 민족적 전통에 대하여』(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237~244쪽.

2) 논문

김옥경, “민족의 우수한 비물질문화유산들,” 『천리마』, 제8호(2016), 94쪽.
리광훈,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추어탕,” 『조선녀성』, 제10호(2018), 55쪽.

2) 신문

강류성, “민족문화유산을 길이 빛내여가시며,” 『통일신보』, 2020년 4월 6일.
성필창, “민족경기와 민속놀이로 단오를 즐겁게,” 『로동신문』, 1989년 6월 9일.
오철룡, “비물질문화유산보호와 인류문화의 지속적발전,” 『로동신문』, 2013년 3월 24일.
_____, “유구한 민속전통이 활짝 꽃 피난다,” 『로동신문』, 2002년 9월 22일.
황명희, “800여개의 민족음식봉사망 운영,” 『로동신문』, 2004년 12월 26일.
“20여개 대상이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 『민주조선』, 2017년 11월 7일.
“각지에서 적극 장려되고 있는 민족음식문화,” 『로동신문』, 2002년 10월 28일.
“거리와 마을에 차넘치는 설명절의 환희,” 『로동신문』, 2017년 1월 29일.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 새로 등록,” 『로동신문』, 2021년 2월 2일.
“날로 풍부해지는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 『민주조선』, 2018년 10월 24일.
“도천리의 단오명절,” 『로동신문』, 2002년 6월 16일.
“맛있고 영양가높은 민족요리,” 『로동신문』, 2019년 4월 21일.
“민속명절에 넘치는 아름답고 고상한 정서,” 『로동신문』, 2003년 2월 2일.

“우리의 것이 제일 좋아,” 『로동신문』, 2003년 6월 4일.

“전국민족음식전시회 진행,” 『로동신문』, 2015년 11월 28일.

“추석날과 더불어 꽃피는 우리의 민속전통,” 『로동신문』, 2015년 9월 27일.

“활발히 진행되는 비물질민족유산보호사업,” 『로동신문』, 2014년 1월 19일.

4) 기타 자료

“민족성의 상징 조선치마저고리,” 조선중앙통신, 2020년 11월 24일.

“비물질문화유산의 보호 및 계승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 조선중앙통신, 2021년 11월 5일.

“우리 인민의 설맞이풍습,” 조선중앙통신, 2021년 2월 10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권혁희, “이데올로기, 조상의례, 술판과 주패놀이: 현대 북한 명절문화의 수행적 전환에 관한 소고,” 『북한의 민속』(서울: 민속원, 2020).

2) 논문

권혁희, “북한의 문화유산 담론의 창출과 변화,” 『북한학연구』, 제17권 1호 (2021), 393~425쪽.

_____,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의 변화와 특성,”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08), 209~228쪽.

박민주, “김정은 시기 조선옷 전통 재구성,” 『현대북한연구』, 제23권 1호(2020), 220~258쪽.

이애란, “북한 추석, 제사 잘못지내 불운 닥칠라. ... 장마당 분주,” 『통일한국』, 310권(2009).

이지순, “기념일의 경험과 문학적 표상: 북한의 국제부녀절 기념의례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47집(2018), 225~266쪽.

3) 기타 자료

이승현, “가야금 제작기술·송농 등 국가비물질 문화유산 등록,” 통일뉴스, 2017년 5월 19일.

_____, “고려약물 찻질, 고려약 음식요법 등 비물질문화유산 등록,” 통일뉴스, 2018년 10월 28일.

_____, “북, 24절기 풍습·회령 백살구 등 6가지 비물질문화유산 등록,” 통일뉴스, 2020년 1월 6일.

_____, “북, ‘견우직녀 전설’ 등 13개 비물질문화유산 새로 등록,” 통일뉴스, 2017년 1월 9일.

3. 국외 자료

1) 단행본

Regina F. Bendix, Aditya Eggert and Arnika Peselmann, *Heritage Regimes and the State*(Göttingen: Göttingen University press, 2013).

Cultural Heritage Process of North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Changes in Everyday Life: Design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raditional Holidays, Korean Costume, and National Food and Changes in the People's Living Culture

Kwon, Hyeokhui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design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one of the most active areas of North Korea's cultural heritage-related policies. North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can be said to be an extension of the Korean nationalism that has continued since the late 1980s, a part of the Kim Jong-un regime's cultural policy that shows North Korea as a normal nation. Among them, traditional holidays, Korean costume, and national food not only occupy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ut are also closely related to the living culture of the ordinary people. However, the people's practice of carrying out it is not limited to passive actions based on a sense of political duty, but is

changing in various form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raditional holidays, the phenomenon of marketization accelerated after the ‘arduous march’ and the existing cultural inertia that does not match socialist lifestyle is appearing in various ways. In that sense, the North Korean people are accepting or adjusting authoritative discourses such as nationalism and immaterial cultural heritage system in their own way of life through leisure on holidays, consumption of food and clothes, and the practice of ancestral rites.

Keyword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policy, traditional holidays, Korean costume, national food, everyday life